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세우, 방용승, 염경석, 서정길

수신처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전북지역 언론사
참고	언론사는 사회부
내용	교섭 거부하는 전북고속 규탄
담당자	063-278-9331 (채민)

[성명]

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 거부하는 전북고속을 규탄한다!

- 황의중 사장은 즉각 노사 교섭에 나서라!

5개 버스회사의 노사가 파업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를 한 상황에서 전북고속의 불성실한 교섭참여로 노사 교섭이 계속해서 결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 노동자들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연기하면서 파업 해결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번 주에 버스파업이 일단락 될 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기간 전북고속은 파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며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파업 기간 내내 불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했으며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용역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노조원들을 위협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다. 여기에 노조 지회장이 용역 경비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게다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이하 가처분)에 승소한 노동자들에게 성실교섭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는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는 비열한 행위도 저질렀다.

어느 누구도 온갖 핑계를 대며 교섭을 거부하는 전북고속 편을 들고 있지 않다. 법원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내야하는 이행강제금도 이전보다 증가한 3백만 원으로 결정했다. 법원도 교섭 약속을 믿었던 노동자들을 배신한 전북고속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은 것이다.

그러므로 뻔뻔하게 민주노총에 사과를 요구하는 황의중 사장이야 말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사죄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과 전주시전북도 역시 마지막 걸림돌인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고속 교섭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난 기간 보여줬던 움직임들은 재보선 선거, 지역 축제 등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약삭빠른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파업을 이끌어왔던 노동자들이 30일이 넘게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온몸으로 파업해결을 외치고 있는 저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사측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들이 져야 한다.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관계 당국들도 마지막까지 교섭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북 도민의 눈과 귀가 전북고속의 협상에 쏠리고 있다. 우리는 전북고속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에 파업 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1. 4. 28.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